

제278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
제1차 회의 2021. 4. 23.(금)

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자치행정위원회

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

1. 제안경과

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14일 박성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4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심각한 저출산 위기 시대에 우리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주거·양육·교육·문화여가·건강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다자녀가정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라. 다자녀가정 지원내용을 규정함(안 제6조)
- 마.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불임1
- 나. 예산조치 : 불임2 (비용참조)
- 다. 관련부서 : 복지정책과
- 라. 입법예고 : 2021. 4. 15. ~ 4. 21.(6일간) / 의견없음.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하여 통하여 사회·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전입니다.

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“다자녀가정”을 둘째 이상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 등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는 지원 대상을 안 제6조는 다자녀 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지원, 양육지원, 교육지원, 문화여가지원, 건강지원 등을 우대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
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환수와 중복지원의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 우리시 출산율 감소에 대한 위기 인식을 바탕으로 다자녀가정을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대한 포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조례라 여겨지며 집행부에서는 각 분야에 대한 우대 및 지원 사업이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[우리시 자녀수별 가구 현황 (가구수)]

(`20.12월 말 기준)

구분	전체세대	자녀수별 가구 현황(가구수)									
		계	1자녀	2자녀	3자녀	4	5	6	7	8	9
2016	251,335	83,014	30,748	43,352	8,159	690	65	-	-	-	-
2017	255,594	81,020	30,346	41,890	8,044	670	70	-	-	-	-
2018	271,647	79,583	26,935	43,062	8,746	769	58	11	1	-	1
2019	276,656	79,666	27,408	42,791	8,644	750	60	11	1	1	-
2020	285,334	79,525	27,726	42,437	8,554	728	66	12	1	1	-

※18세 미만 자녀 포함 가구, 자녀 모두 성인인 경우 제외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본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을 위해 소요되는 다양한 보건·복지서비스와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소요되는 전반적인 사업비용 등이 해당 됨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2호

※ ‘의안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’ 비용추계서에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비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

3. 미첨부 사유

재정수반요인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 첨부을 생략함

4. 작성자

복지국 복지정책과장 강태일

붙임 2

관계법령 발췌서

☑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

제8조(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·지원하여야 한다.

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